# 대선 전초전 무한 경쟁 … 호남 현안 예산 대박 터뜨리나

**여야, 예산 국회 앞두고 지역사업 챙기기**

## 더민주, 특위구성 최대 사업 2~3개 관철 방침
## 새누리당, 호남 광역단체와 현안 협의 나설 듯
## 국민의당, 여야 이견 조정하며 틈새 실리 챙기기

국민의당 쌀값 폭락 농민 간담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왼쪽),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 박준영 의원이 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쌀값 폭락 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이후 진행되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호남 현안 챙기기 경쟁에 나설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확보를 위한 여야의 전초전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호남의 현안 사업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호남 민심 회복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대규모의 호남 특위(호남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맡고, 수석 부위원장에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장이 포진한다. 여기에 양향자 여성위원장 등 최고위원들이 부위원장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특위 위원들로 참여한다.

특히, 더민주는 광주와 전남, 전북의 2~3개 최대 현안 사업을 예산 국회에서 관철해 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방침이다. 추미애 대표가 국감 이후에 광주 등 호남을 방문, 호남 특위에 대해 설명하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호남에 대한 더민주의 진정성을 예산 국회를 통해 보여주겠다"며 "격차 해소는 그동안 소외 받았던 호남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대표의 의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예산 국회에서 호남을 적극 챙기겠다는 자세다. 여기에는 차기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 20% 이상 확보'를 공언한 이정현 대표가 선두에 서고 있다.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월말 호남권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던 이 대표는 예산 국회를 전후해서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 호남 현안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예산 국회를 전후해 호남 광역단체와 현안 협의에 나설 생각"이라며 "호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등 중앙 정부에서 부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사업과 지자체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에 정부 차원의 해법이 나오기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 3당인 국민의당도 예산 국회를 앞두고 원내 1, 2당의 강력한 '호남 러시'에 마음이 바쁘다. 국민의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광주·전남·전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챙겨 예산 국회에서 이를 실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여야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더민주의 호남 공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예산 국회 이전에 호남 현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선출되는 비대위원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 호남의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3당 구도를 만들어낸 호남 민심이 정치권에 '메기 효과'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의 경쟁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건국절 최대 논란 … 역사전쟁 2라운드 예고

**국정교과서 현장본 내달 공개 쟁점은**

## 이승만·박정희 재평가 초미 관심
## 북한 관련 서술도 크게 달라질 듯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다음달 말 공개된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질 당시부터 뜨거운 찬반의 대상이 됐던 만큼 실제 교과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이 공개되면 격렬한 역사 논쟁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에 앞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짚어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국정 교과서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자 국가 정통성 논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1948년 5월10일 남한 단독으로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17일 헌법 제정에 이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 상반되는 데서 기인한다.

대체로 진보진영은 외세 개입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출발이라고 보는 반면, 보수진영은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 정부를 수립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이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영토·국민·주권이라는 3요소를 온전히 갖춘 진정한 의미의 국가 탄생일이며, 이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진보진영은 뉴라이트 등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일본 강점기 친일파의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즉 보수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승만·박정희 재평가**=6·25는 '북 도발' 명확히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특히나 이승만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에서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이고, 박정희 역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지금껏 교과서에서 장기독재, 부정선거 등 부정적 평 일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국의 기틀을 세웠다는 시각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공과'(功過) 가운데 경제성장 등의 부분에서 '공'을 강조하는 내용은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과서가 그의 '과'에만 치중했다는 게 보수진영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북한 관련 서술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 교과서가 북한에 관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국정화 논리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6·25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더민주 '백남기 특검법' 법사위 거치기로

## 정춘숙 의원 "서울대병원, 보험 청구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특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야권에서는 특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듣고 절차적으로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를 거치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있지만, 더민주는 국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왔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본회의에 바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며 "살짝 운만 띄웠던 것이지, 언제 본회의로 바로 간다고 했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을 중심으로는 본회의에 특검안을 바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유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난해 11월14일부터 사망한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으며, 서울대병원은 11차례 모두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